

편입학제도, 이렇게 본다

학생 중심의 편입학 논의가 필요하다

김 옥 규

한양대 입학관리과장

1. 서 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은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안, 대학 행정체제의 경영체제로의 전환, 교수의 질 관리체제의 도입, 학부제 도입, 대학원중심체제 구상, 입시 자율화, 학사 자율화, 발전기금 모금, UR 개방에 따른 대책 마련 등 많은 개혁과제들이 대학의 변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대학평가인정제가 도입되어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적 인정을 받고, 이를 계기로 대학이 자기점검의 기회를 가져 대학

운영의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대학의 우선과제가 되었다.

국제경쟁 시대의 대학에서는 사무 행정의 합리화, 대학 경영의 효율화 그리고 학사 운영의 최적화 등으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 속에서 그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학문의 수월성과 자율적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장애가 되고 저해가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다.

2. 편입학제도의 배경과 문제점

1) 편입학시험 시행의 배경

우리나라의 대학입시제도는 십여 차례 이상의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러한 잦은 변화는 입시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는 국가와, 자율성을 강조하는 대학 간의 갈등이 주된 기초를 이루어 왔다.

대학이 입시를 통하여 선발하고자 하는 학생은 고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과, 입학후 각 전공 영역에서 개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다. 그러나 암기 위주의 획일적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 위주의 입시제도 아래 입학한 학생들이 개인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향상시키고 논리력을 개발시키기보다는 입학후 자신의 능력과 적성이 전공에 맞지 않아 갈등을 겪거나, 전문대학 졸업후 공부를 계속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편입학제도이다.

이는 1980년까지 시행되어 오다가 1981년 입시제도가 입학정원제에서 졸업정원제로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진 제도였으나, '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의 조치로 인하여 편입학의 본격적인 문호개방이 이루어졌다. 교육부가 '95년 12월 19일자로 학무 81211-1572호인 '대학의 전과 및 편입학 확대 방안 통보' 공문을 통하여 밝힌 편입학 확대방안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학에서 학과·학부 또는 계열을 변경하거나 학사 편입학을 허용할 수 있는 정원의 비율을 높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이나 학사학위가 있는 자가 본인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일반 편입학 여석 산출 기준을 합리화하여 대학에서 일반 휴학이나 입대 휴학 등으로 생겨난 교육 여력이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학생들의 학교간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전문대학

졸업생과 독학학위 취득자 등에게도 계속적인 교육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지방대학의 재정적 어려움

편입학의 문호 확대는 입시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교육적인 고민보다는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 특히 지방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낳게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요즘에 밀어닥친 IMF 사태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어려운 사립대학의 재정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대학들이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안일한 경영으로도 성장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대학의 규모에 맞지 않는 학과 및 단과대학의 증설 등 무리한 외형 확장과 각종 평가 실시로 인한 과당경쟁이 일부 사립대학 부실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미등록자와 휴학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방대학에게는 더욱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결과 지방의 사립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우수한 교수진, 연구 기자재, 교육시설 확보가 수도권 사립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편입학의 문호가 넓어진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 또는 우수한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실제 통계에서도 '97년 11월 5일자 중앙일보는 '97학년도 1학기중 62개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편입학한 학생은 1,867명으로 '96학년도 1학기의 1,407명에 비하여 460명이 늘었음을 보도한 바 있다. 한양대의 경우, '96학년도 2학기 2학년 일반 편입학의 경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지

원자수는 278명으로 전체 지원자 958명의 29%를 차지하였으며, 선발인원 132명의 25.8%인 34명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합격하였다. '97학년도 1학기의 경우 2학년은 705명 지원자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학생 지원 인원은 548명으로 77.7%를, 선발인원 60명 중 46명으로 76.7%를 차지하였다. 3학년의 경우에는 1,705명 지원자 중 64.4%인 1,098명이 지원하였으며, 142명의 선발인원 중 70.4%인 100명이 합격하였다.

이상의 한양대 자료를 보아도 지방대학 출신자가 전년도 대비 40% 이상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여타 수도권 대학들에도 역시 지방대학 출신자들의 지원 비율이나 합격률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여파로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3) 편입학시험 준비에 따른 학사운영의 문제

정부는 일반 편입학 시행후 “편입학 문호 확대로 교육 소비자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입학하자마자 편입학 준비를 하는 지방대학생이 많은 등 부작용이 있다.”며 편입학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4년제 대학 1학년 수료후 편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최소한 2학년을 마친 학생에게 응시자격을 주는 쪽으로 고치는 것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대의 수업 정상화를 위해 과거 대입 본고사와 같이 영어 등 특정과목으로 선발하는 현행 편입학 전형방법을 개선, 재적 학교의 성적을 상당 부분 반영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하였다. 결국 교육부는 '97년 11월 18일 “98학년도 전기 편입학 관련 사항 통보”에서 편입학으로 인한 대학교육 파행 예

방 방안으로 대학 입학시 복수지원 기회의 확대로 본인의 적성에 적합하지 않은 대학 및 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에 학업 성취의 동기가 유발될 수 있도록 학생지도 노력을 권고하였고, 입학 초기부터 현재 재학 중인 대학에서 학습을 등한시하고 편입학 준비를 위하여 학원 수강에 열중하는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편입학 모집시 전적 대학에서의 성적을 반영해 주기를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입학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96학년도를 기준으로 대학별 전형 방법을 같은 고사 과목으로 일관해 온 대학이 있는가 하면, 과목수를 줄여 나가는 대학, 아예 시험 자체를 폐지하고 전적 대학 성적만으로, 즉 서류전형으로만 편입학을 시행한 대학들이 있었다. 이는 112개 대학의 자료를 토대로 볼 때, 대학 편입학이 대폭 활성화되면서 편입학시험 과목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편입학 전공과 무관한 전적 대학의 평점 또는 서류전형만으로 계열 제한을 두지 않는 마구잡이식 학생선발로 새로운 대학에 편입학한 이후에도 다시 중도탈락하는 등의 후유증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98학년도 부터 학생 확보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대학들이 다투어 전형방식을 변경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험과목이 지나치게 단순해 오히려 대학입시보다 편입학시험이 쉽다고 생각한 많은 학생들은 지방대학 등에 안전하게 합격해 놓고 서울지역 등으로 편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 편입학시험에 따른 사회적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재정의 어려움이나 학사운영의 문제점 외에도 사회적으로 신 이산

가족 현상을 호소하는 학부모도 생겨나게 되었다. 딸은 경상도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아들은 충청도에 있는 대학을 다니며, 남편 직장은 서울인 주부는 바쁜 집안 살림을 하면서도 한 달에 며칠씩은 지방에 있는 자식들이 걱정되어 밀반찬을 싸들고 찾아가는 신 이산가족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경우는 몇 배의 생활비를 지출해야 하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여자아이를 멀리 보내놓은 걱정은 말할 수 없이 많다고 한다. 심지어 어느 여학생 학부모는 멀리 보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지방의 4년제 대학을 포기시키고 수도권 전문대학에 진학시킨 경우도 있다.

3. 시장경제 원리와 학생의 권리

최근 지방 21개 대학 총장들은 모임을 갖고, 정부가 편입학을 확대하면서 지방대생들의 서울과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탈이 가속화해 학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학생 감소에 따른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며 편입학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편입학 확대 조치 이후 지방대생 대거 이탈과 사교육비 증가, 교육의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그 방안은 현재 2, 3학년에 허용된 일반 편입학을 3학년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과, 국·공립대의 경우 전문대 졸업자에게만 편입학을 허용하고 사립 대학에도 이를 권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편입학 실시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논의보다

는 현행 실시되고 있는 제도 자체의 보완과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확립, 대학의 경영 합리화를 조속히 이루어 편입학의 본래 취지인 학생 본인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대학들은 재학생들이 왜 타대학으로 편입학하려 하는지, 대학의 학과 인지도를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떠나려는 학생들을 억지로 붙잡고 교육시킨다고 학교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휴학생이 많고,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편입학으로 타대학으로 가는 학생이 많은 것만은 아니다. 수도권 대학들도 이동이 늘고 있으며, 휴학생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98학년도 1학기 지방대학 편입학 상황을 보면 수도권 대학 못지 않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약 1.7:1 정도의 경쟁률을 보아도 편입학으로 빠져나간 인원은 대학의 노력에 따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모든 대학이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교육 풍토와 각 대학마다의 특성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면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더구나 현재 대학의 현실은 대학입학 정원과 대학 지원자의 변화 추세로 볼 때, 2000년 이후에는 대학입학 정원이 지원자 수보다 많은 이른바 대학의 공급 초과 현상을 앞두고 있다. 또 IMF 시대의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전개될 경제구조의 재조정엔 사회 전반의 비효율적인 체제를 개선하여 재구조화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다. 대학 조직의 경우에도 교육의 질 관리나 효율적 운영을 무시한 채 거대화되고 있는 종합대

학교 체제는 재구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IMF 경제위기가 아니더라도 대학은 과거와 같이 국가의 지원만을 기대하며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개방과 세계화의 흐름은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로의 돌입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는 곧 외국 유명대학과의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다.

4.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의 절박한 상황에서 편입학 확대 실시로 인한 학생수의 감소는 일부 대학 운영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모든 대학이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상황일 것이다. 더구나 현대 교육의 추세는 수요자(학생)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수요자(학생)의 요구 앞에서 편입학의 실시는 어떠한 이유로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모든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편입학의 실시는 필요한 것이다.

물론 편입학의 확대 실시가 반드시 대학 교육의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편입학제도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칭 비인기 학과의 도태라든가,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일부 지방 사립대의 재정난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은 나타날 수 있다. 또 대학을 단순히 시장경제 논리로만 일관한다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학문분야가 도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기능만을 우려하여 학생들에게 주어진 기본권리를 제한하려는 논의보다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의 합리화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기초학문 분야는 정부 차원의 진흥책을 마련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1항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며'라고 표현되어 있듯이 편입학제도는 학생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권리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그에 따른 제도 보완을 통하여 편입학은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학생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발휘하는 진정한 교육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그 교육의 장을 통하여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

김옥규/건국대 무역학과와 한양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한양대 교무처 입학관리과장으로 재직중이다.